

제34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3년6월14일(수) 10시

의사일정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2.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명숙·이철수·김선태 의원)(계속) 1면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34면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태안 화동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도민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놓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명숙·이철수·김선태 의원)(계속)

(10시03분)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 의원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혜의 자연 자원과 멸종 위기 식물을 보존하고 있는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은 김태흠 도지사님께 드리는 다섯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대책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정부의 공공기관 충남 도내 유치 현황을, 네 번째는 KBS 방송국 및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것이며, 마지막은 주민 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립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충남 15개 시군 중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아홉 곳에 대한 충남도의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정책에 대해 산업 분야별, 세대별 예산이 포함된 실행 계획과 사업 시행 후 향후 기대 효과, 즉 인구 및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경제지표는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 중 고위험 지역과 위험 지역에 대한 충남도의 기준과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 정책이 집중되고 인구가 늘고 있는 충남 북부권의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과 그에 대비되는 인구 감소 지역인 남부권, 특히 청양·부여·금산으로 대표되는 지역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21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충남에는 청양·부여·금산·서천·예산·태안과 공주·논산·보령 등 9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식과는 다소 다르지만 널리 사용되는 지표인 소멸 위험 지수로 보면 충남의 태안·청양·부여·서천·금산 등 다섯 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구분되고, 홍성·예산과 당진·서산·보령·공주·논산 등 7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즉 천안·아산·계룡 3개 시를 제외하면 충남 전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고요, 충남도의 경제활동 주력인 생산 인구는 2013년 69.7%에서 2022년 67.7%로 2%만 감소했지만 2050년이 되면 48.5%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1만 9800명으로 전체 충남 인구의 36.6%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되어 충남의 밝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충남 도정 차원에서 균형발전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촌 협약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도내 9개 지역에 대한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행안부의 36개 특례를 어떻게 적용하고 지역 특징을 살릴 것인지 종합적인 분석과 계획을 통해서 정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는 주력을 해

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충청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을 확보한 상세 내역과 집행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각 시군의 사업비 확보에 대한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사업 완료 후 기대되는 효과, 즉 인구 및 일자리 증가와 경제지표 증가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역 주도 지방 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충남도가 -2022년~2023년도분입니다- 418억 4900만 원을 배분받았고, 금산군이 210억 원, 부여와 청양이 각각 168억 원, 논산과 서천은 각각 140억 원, 보령과 태안은 각각 126억 원, 공주와 예산은 각각 11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사업으로 사업 발굴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화된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대응 전략으로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도 인구 감소를 막고 유지하고 증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고 운영 방식 또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대안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2의 균형발전 사업이나 농산어촌 사업이 되지 않으려면 충남도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이 되는 9개 시군은 그동안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까지 균형발전기금을 지원받았고,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농산어촌 개발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 신활력 사업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 그리고 농촌 협약 사업 대상지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거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자치단체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지역활력타운 조성,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등 지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경쟁적으로 공모하고 선정되어 사업이 또 추진될 전망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비가 적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대로 계획이 세워지고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보다 기금 사업 자체를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 누가 담당하고 책임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의 균형발전 사업이나 농산어촌 개발 사업처럼 시설비 위주의 사업비 집행이 아니라 10년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므로 사람과 조직 양성에 더 많은 예산 배려가 필요합니다.

충남도가 정책 플랫폼이 되어서 시군마다의 비슷한 정책을 조정하고 특색을 살린 정책을 제안해야 됩니다.

이번 정책이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을 재정

리해서 로드맵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충남 유치에 관련한 충남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관련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공공기관 대상과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충남 균형발전을 위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남도는 2020년 정부로부터 제2기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지만 공공기관이 이전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지역별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된 혁신도시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서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계획 발표가 총선 이후로 지연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는 예측 기사와 각 자치단체별 유치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 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르면 연내 이전 가능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이전 공공기관이 500개 이상 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지방 이전 공공기관 대상은 일단 수도권에 위치한 360개 기관입니다.

여기에 최근 이전 기관이 500개일 수도 있다는 발표까지 나오면서 혁신도시 지역 이외의 인구 감소 지역은 자치단체별 연대를 통해서 공공기관 이전 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동영상 상영)

뉴스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또한 많은 도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타깝고 통탄스럽게도 충남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1차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공기관이 한 곳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2차를 통해 유치해야 하는데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는 뉴스에서 본 것처럼 국회에서 공주·논산·부여 등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자치단체들이 연대해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혁신도시 외 인구 감소 지역에 우선 배치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맞는 주장입니다.

다른 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 1차 이전을 혁신도시에 했으니 2차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해 달라는 주장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의 균형발전을 위해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유치를 혁신도시로 지정된 도청 소재지인 홍성·예산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500곳 이상이라고 하니 충남의 경우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배 이상 받아서 혁신도시 몫과 인구 감소 지역 몫을 나눠서 도내에서도 균형발전이 되도록 충남도가

전략을 잘 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KBS 공영 방송국과 충남도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의 충남도 유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충남도가 해 온 일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예산 집행 및 편성과 방송국 유치 완료 그리고 지방은행 유치 완료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KBS 방송국이 충남에만 없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KBS는 전국에 총 18개의 지역 방송국이 있습니다.

강원에는 강릉·원주·춘천이 있고, 바로 옆 충북에도 충주와 청주가 있습니다.

오로지 충남에만 없습니다.

화면 속 사진은 2020년 11대 충남도의회에서 KBS 방송국 유치를 위해 서울 본사 앞에서 출근길 1인 시위를 할 때의 모습입니다.

한겨울이라 매우 추웠습니다.

충남은 공영방송만 없는 것이 아니라 민영방송, 즉 MBC·SBS 같은 주요 지상파 방송국도 없습니다.

충남도과 충남도의회는 KBS 방송국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은 단순한 뉴스 전달 차원을 넘어서 재난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재난 방송 역할 비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은 충남은 시청자들의 지상파 뉴스 의존도가 높고 농어업 등 1차 산업 종사자 비중도 13.8%로 인근 지역보다 높아서 재난 주관 방송사인 KBS의 필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대, AI 시대라고 하는데 충남은 디지털과 문

화혁명의 대명사인 방송문화조차 없으니 참 개탄할 노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BS는 지난 2004년 KBS 방송국이 폐지된 이후 충남에 20년 가까이 KBS 공영방송국을 설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KBS 연간 수신료를 볼 때 세대수로 계산한 예측 수신료로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요, 방송국이 없는 충남에서는 월 25억 원, 연간 300억 원이 넘는 수신료를 KBS에 내고 있습니다.

방송국이 3개나 있는 강원도는 227억 원, 대전은 203억 원, 세종은 48억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수신료는 감면 등이 있어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충남 도민은 KBS의 봉입니다.

그리고도 뉴스 시간이 되면 충남·대전·세종 뉴스가 아닌 대전·세종·충남 뉴스가 됩니다.

2022년도에 충남에 폭우가 쏟아지고 올해 산불이 났어도 많은 방송이 보도되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 뉴스 시간을 배정받는다고 하면 강원이나 경북, 전북 등보다 충남이 지역 뉴스와 관련한 정보 시간이 매우 적어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이제 차라리 KBS 방송국을 유치하지 말고 KBS도 공공기관이니까 충남총국 대신에 본사 이전을 충남으로 하라고 요청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충남 도민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세 번째로 수신료를 많이 납부하고 있으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 시청료 거부 운동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충남도 차원에서 시청료 거부 운동으로 KBS를 압박해서라도 방송국을 유치해야 한다는 제안을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새 정부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되고 민선 8기 중점 과제로 확정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서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방은행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충남만 지방은행도 없고 공영방송도 없어야 합니까?

지방은행이 있는 다른 광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은행은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 사회 환원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를 들어보면 전북은행이 당기순이익의 10.7%인 222억 1300만 원을 지역 사회 공헌에 투자를 했습니다.

광주은행은 11.68%인 301억 원을, 그리고 경남은행이 12.42%인 346억 5100만 원을, 대구은행이 13%인 510억 원을, 부산은행은 15.2%인 692억 8100만 원을 주로 지역 사회 공헌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충남은 어떤가요?

젊은이들이 원하는 금융 일자리도 없고 지역 사회 공헌 사업도 없습니다.

지방은행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집니다.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산업자본, 금융자본 관련 기관 유치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에 자본이 재투자되지 않으면 지방은 소멸됩니다.

또한 충남에 지방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으로 충남 주민 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

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도비 12%, 시군비 28%, 마을 자부담 60%인데 주민들의 자부담을 줄이고 지역자원시설세로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협의체가 되어서 마을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마을에 땅은 있는데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자부담 기금 60%를 부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미래 에너지를 확보하는 마을 단위 공동체 사업에는 지원을 대폭 늘리고 사업비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특정자원시설세는 2024년부터 kWh당 0.1원에서 0.3원으로 인상되어서 충남도 및 해당 시군의 세외수입이 늘어납니다.

충남도의 경우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이나 단순 행사의 연례 반복 사업비로 집행하기보다는 목적에 맞도록 대체 에너지, 재생 에너지 개발 또는 마을발전소 설립 등에 자부담을 줄이고 도비 지원을 대폭 늘리도록 정책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가 공익적으로 할 경우 자부담을 충남의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부담해서 미래 에너지를 확보하고 마을은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공동체 사업에 쓰다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

는 멋진 선진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 질문 다섯 가지는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 그리고 중앙 정책으로부터 소외되는 충남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태흠**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께서 인구 감소 지역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균형발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감소 지역의 근본적인 이유는 고령화, 낮은 소득,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농촌 지역에 젊은 층 유입이 안 되는 것이 저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 유입을 위해서는 대단위 스마트팜,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를 통한 청년농 유입을 위한 환경 개선, 지역의 특색과 특장을 살린 발전 동력 확보, 수도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대학의 지방 이전, 외국인 도내 정착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해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조성 등 5개 사업에 48억 원을 투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질의 주셨는데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으나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 10개 혁신도시에 총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됐습니다.

혁신도시 평균 11개 공공기관에 4200명이 이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프로 스포츠의 드래프트제 방식을 적용해서 1차 공공기관 이전 규모인 대형 공공기관 10개 이상을 우리 도에 우선 배정한 후 잔여 공공기관은 12개 혁신도시에 균등 배치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에게도 수차례 요구했고 관철되도록 철저히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과정 속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라면서 조만간에 공공기관 이전이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도 공공기관유치단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할 기관에 우리 충남도가 타 지역보다 경쟁력에서 더 우위라는 팸플릿도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밖의 공공기관 이전과 별개로 해서 충남의 사무를 하면서 본부는 대전시 지역에 통합되어 있는 31개 공공기관에 대해 분리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H라고 하면 대전충남본부 하는 부분을 대전과 충남을 따로 분리해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제

가 관련 중앙 부처에 서한문도 발송했고 당해 공공기관에도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해결될 때까지 강력한 요구를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 31개 공공기관이 분리가 된다면 우리 도에 1500여 명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과 별개로 해서 지금 충남의 사무를 보면서 대전 지역에 통합되어 있는 공공기관 이전은 몇 개의 큰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 공공기관 유치 계획에 대한 질문은 공공기관 이전 입지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김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려면 이게 쉽게 갈 문제가 아니고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직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구체적인 입지 기준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지역을 논하는 것은 충남도지사로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KBS 공영방송국 유치와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KBS 방송국 부재에 따른 도민 소외감에 대해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 부여·청양 폭우, 올해 홍성 등 4개 지역에 산불 등이 났을 때도 뉴스 보도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지 못하였고, 저도 충남도지사로서 방송 출연 관계 때 문에 대전 가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무

척 상합니다.

또 KBS에 납부하는 수신료 대비 제공 받는 방송 서비스도 의원님 말씀대로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KBS 사장을 직접 만나서 -내용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KBS 복합방송 시설 건립 로드맵 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정무부지사, 공보관 등이 실무책임자와 수차례 접촉하여서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올 4월에 KBS로부터 충남을 방문해서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올 연말 정도 되면 가시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KBS와 함께 도민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시간이 확정될 거고 또 그러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KBS와 관계 기관에 협의를 계속 진행해서 올해 말까지 가시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에 지방은행 설립 활동과 완료 계획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저 역시 공약이었고 또 민주당 도지사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될까 많은 자문들도 받고 그랬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자본금융의 대형화, 글로벌화되는 상황 속에서 현 시중 은행과 같은 지방은행 설립이 과연 효과가 있는냐라는 의문과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셨듯이 미국에서 조그마한 금융의, 그런 환

경이 되니까 제일 어려워지는 것은 작은 은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이 무척 고민스러운데, 사실 우리가 지방은행 설립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까 김명숙 의원님 말씀 있으셨듯이- 사회 공헌이라든가 저리 대출이라든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된다면 저는 꼭 시중 은행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은행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쉽게 얘기해서 자본금 1조를 갖고 시중 은행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기존 점포를 하게 된다면, 15개 시군에 15개 점포를 설치하게 되면 자본금에서 벌써 많은 포션이 잠식당한다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시중 은행 과점 체제 개선 방안 추이 문제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같이 맞물려서 진행하고 있고 또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은행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민 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지역자원세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2021년도에 3개소, 2022년도에 7개소 해서 10개소가 설치됐고 올해는 9개의 마을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해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

용에 저는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60%가 자부담 비율이고 타 시도 같은 경우도 경남 같은 경우는 60%인데 광주는 50%, 세종 30%, 경기 20% 해서 각 지역마다 자부담률이 제각각인데, 저희도 주민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타 시도 사례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고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형태로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김명숙 의원님께서 인구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인구 감소 지역 지정 주기 5주년을 맞이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생산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36개 특례 적용 등 종합적인 계획을 담아서 6월 말에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 감소 지역 중 고위험 지역과 위험 지역에 대한 충남도의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정책은 큰 틀에서 국가가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국가 시책에 따라서 2021년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도내 청양을 비롯한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수 적용은 향후 논

의를 거쳐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구가 증가하는 북부권 정책 주요 사업과 예산, 대비되는 인구 감소 지역 주요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 주요 사업으로는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등 대한민국 백년 먹거리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과 예산액은 사업 구상이 완료되는 금년 11월경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주요 사업으로는 균형 발전 사업으로 84개 지구 6919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청년 농업인 육성, 정주 여건 개선 등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 하고 있습니다.

금산·청양 세부 사업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부권 개발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실행 가능 정책 과제를 발굴 중에 있으며 전북 등 광역자치단체 및 서남부권 시군과 머리를 맞대어 경제·사업·관광 등 경계를 허물고 상생 협력을 통해 생활 인구 유입을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직접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 말부터 2년간 1722억을 확보하였으며 주요 기금 사업으로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스마트팜 단지 조성,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구축 체계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63%를 집행하였습니다.

시군에서는 청양 세어 하우스 ‘함께 살

아U’ 사업 등 총 4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집행 실적은 4.7%입니다.

세부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초계정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는 작년 9월에 재원이 최초로 배분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예산 편성, 계획 수립 등 사업 준비 절차 이행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방 소멸 대응 사업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 또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기재부·행안부와 함께 기금 사업 개선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으며, 특히 우리 도는 내년도 투자 사업에 대해서 3차에 걸친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소규모 단발성 투자나 나눠주기식,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 감소 지역의 특징·특색을 살린 문화, 관광, 산업, 일자리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 인구 증가, 정주 여건 개선, 복지 생활 서비스를 확충하여 인구 및 일자리 증가 등 손에 잡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태흠 도지사님과 고효열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의원** 김태흠 도지사님과 고희열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합니다.

저는 예산의 집행과 앞으로의 계획, 숫자를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것은 질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질문 시간이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사실은 간략하게 질문을 드렸고 또 질문 핵심 내용은 6월 5일에 해당 부서에 드렸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저렇게 질문 요지서를 6월 5일에 해당 부서에서는 아마 받았을 거고요, 저 내용 거의 그대로 오늘 질문을 드렸고, 미리 저 질문이 그대로 갔는데 답변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의원이 도정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정책 업무를 보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 의원님들은 집행부가 제공하는 자료 아니면 정책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민에게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료 제출과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께 보충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나오시기 전에 제가 1분 22초짜리 영상을 하나 들고 할 거니까 그것을 보고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좀 크게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5분 동영상 상영종료)

김태흠 도지사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이라 화질이나, 흔들림이 있는데요, 제가 이 동영상을 왜 틀었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태흠** 예?

○ **김명숙 의원** 동영상을 지금 보셨지요?

1분 22초짜리인데요, 제가 왜 이 동영상을, 오늘 도정 질문을 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이 없는 동영상을 틀었는지 혹시 짐작하시겠어요?

○ **도지사 김태흠** 모르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모르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태흠** 예, 눈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장내웃음)

○ **김명숙 의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KBS 방송국이 충남에만 없다, 우리는 시청료를 그렇게 많이 내고도, 한마디로 충남 도민은 KBS의 봉이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잖아요.

36번 국도입니다.

4차선 국도이고요, 36번은 충남·대전권에서 보면 대전에서부터 보령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터널을 지날 때 KBS1 라디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들어갈 때는 음악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터널 안에서는 안 나오고 끝나고 나오니까 다시 나오지요.

사실 우리가 터널이나 도로에서의 재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방송이 안 나오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충남에 KBS 방송 총국이 있었다면 벌써 해결이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터널 한 곳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몇 곳이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지사 김태홍** 저는 지난 민선 7기까지 왜 KBS 총국 유치를 못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민선 7기까지.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지적하시고 문제 제기하시는 것에 100% 동의한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관철시키겠다.

관철시키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드립니다.

○ **김명숙 의원** 답답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충북의 청주 방송국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충북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다른 지역에서 와서 충주나 청주 이런 쪽에 사는 사람들은 충북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전·세종·충남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없고요, 사실 손해 보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제는 정말 2500원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하고 차라리 그 돈을 갖고 지역 방송에 지원을 해서, 그렇다라면 지역 방송이 재난 방송도 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닌가 - 방송 통신망을 더 늘리고 - 이런 생각까지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태홍**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송국 출연할 때 대전에 갈 때마다 자존심이 상한다니까요.

그걸로 답변을 대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KBS 총국 유치 이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이고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결정되면 그 부분은 의회하고 상의해서 ‘그 안에 뭘 집어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명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없이 터널을 지나가는 저 영상을 틈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론가는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정말 목표를 맞춰서 가고 있는지, 저 터널의 끝에 가면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한 대로 오는지 걱정이 되고 좀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공기관 유치, 혁신도시 지정을 굉장히 어렵게 했지만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공공기관 유치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인구 문제 같은 경우도 다른 광역자치단체하고 다르게 사실 충청남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경제나 여러 가지가 튼튼하게 가고 있는데 - 모든 문화나 이런 것들이 - 우리는 도청 소재지가 이전하고 10년 동안 중심이 되지 못하고 경제만 조금 천안·아산 정도 이렇게 가고 있고 사실 나머지는 튼튼하게 충남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도 역시 혁신도시로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충남 도민은, 홍성과 예산은 지금 도청 소재지를 만들기 위해서 1조 2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자족도시 10만,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지요.

그런데 본 의원은 그랬습니다.

도청 소재지만 혁신도시가 된 데는 전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다른 도시는 다 도청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도청 소재지는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으니 국가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를 지방에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내려보내는데 그 내려보내는 기관조차도 도청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북만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같이 되어 있죠.

그런데 충남만 유일하게 도청 소재지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혁신도시를 갖다 얹었으니까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함께, 아까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적법한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해 달라라는 요청이 강력하게 있고, 저는 총선을 통해서 혹시 이런 것들이 관철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혁신도시만 바라보고 유치하려고 하는 거보다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혹시 여기 홍성·예산 지역이 아닌 세종시와 가까운, 정부 부처와 가까운 지역에 오기를 원한다면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맞춰서 할 수 있는 전략을 다각도로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도지사 김태홍** 제가 규정에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혁신법에 따른다”라고 했지요.

그 혁신법에 따라서, 지금 밑의 예외 조항을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무조건 내포에 모든 공공기관을 다 유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아까 세종하고 인접해서 -가고 싶지 않은- 세종 가까이 있는 인접한 데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세종은 이미 자기가 알아서 크는 거고, 지금 중앙 정부가 다 들어와 있고 국회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다 크는 거고 바로 이웃에 공공기관 이전하는 그런 문제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저는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내포 출신도 아니고 아까 인구 소멸 지역 예를 들은 서천군을 지역구로 뒀던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충남 전체가 어떻게 균형발전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서북부권과 서남부권이 불균형 오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저도 도지사로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각 지역마다 특장을 갖고 그 특장에 맞는 공공기관이 있다고 하면 저는 공공기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도에서 입장을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최종 결정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우리 충남 내에서도 각 시군이 경쟁하는 모습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효율성적인 측면이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꼭 도움 되는 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의원** 아, 제가 세종시로 가고자 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 **도지사 김태흠** 세종 주변, 가까우니까…….

○ **김명숙 의원** 세종시가 가까우니까 주변 이런 부분이고요,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적절한 걸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시도로 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살펴봐 달라는 거고요, 저는 분열을 하자게 아니라 당연히 양보를 했습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나머지 13개 시군이 혁신도시를 도청 소재지로 하는 것을 다양보를 한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도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행정구역을 분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잖아요.

저는 아주 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늦었다라고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 기관들이 혹시 충남으로 분리가 돼서 오게 될 때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적극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주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 **도지사 김태흠** 저도 청양 사랑합니다. (장내웃음)

○ **김명숙 의원** 저는 청양만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 **도지사 김태흠** 그리고 또 하나는 청양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장들이 있습니다.

특장들이 있어서 지금보다는 인구도 더 유입되고 또 삶의 질도 높아지고 소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대도시에 못지않게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탈바꿈을 시키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유치 과정 속에서 이런 기관은 청양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청양에도, 공공기관 이전과 별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무가 대전하고 통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 기관은 적극 고려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공공기관 이전은 타시군에서 지금 난리인데요.

공공기관 이전 이게……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그러겠어요?

지역으로 안 내려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준강제성을 띠는 거잖아요.

그러면 준강제성을 땔 때 그나마 내려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저는 어느 정도 자신하는 게 뭐냐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대전과 그다음에 우리 충남이 그래도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하고도 가깝고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저쪽 전남 밑으로나 아니면

경남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가는 거보다는 충청권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을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게 저의 일방적인 추측이 아니라 제가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몇 군데를 만나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긍정적이다.

다만 이게 보면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래프트제를 도입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생하고 똑같이 놓은 상태에서 이걸 분배하려고 하면 되겠느냐, 우리는 일단 신생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먼저 배분을 하고 해라.

그리고 사실은 지금 공공기관이 230개 정도 남았다, 몇 개 남았다 얘기하는데 내용은 몇 명 안 되는 거까지 다 합쳐서 그렇지 큰 거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벌써 기존의 혁신도시들이 다 선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답답해요.

답답해서, 제가 왜 스포츠의 드래프트제 부분을 대통령부터 주요 핵심 부처 장관들이나 아니면 균형발전위원회에도 강하게 얘기하고 시도지사 회의 때도 강하게 요구를 하나면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해야 큰 거 몇 개라도 건지지 그렇지 않으면 큰 거 몇 개도 건질 수가 없다.

그리고 숫자는 비슷하게 하더라도 작은 것들 몇 개를 형식적으로 주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경제나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얼마일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저도 중앙정부에서 로드맵을 발표하는 부분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양하

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무 부서에서 방문해서 김명숙 위원장님한테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하고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한 것만큼 충남 도내에서도 도내의 지역별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도청 소재지를 이전하고 10년 동안 인구 10만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아직도 5만도 안 되는 곳이고, 그다음에 혁신도시까지 사업을 안고 있지만 사실 변하는 건 크게 없어서 지사님의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부서 아니면 충남도 기관의 업무는 정책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지사님!

혹시 박완서 소설가님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 소설 제목 기억하세요?

○ **도지사 김태흠** 박완서 소설가는 아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런 소설이 있어요.

자전적 소설인데, 싱아가 뭔지는 아시죠?

‘시영’,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제가 왜 이렇게 뜬금없이 지방 소멸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박완서 소설가님의 이 제목을 말했냐면 우리가 그동안 9개 시군에 많은 예산들을 투자했습니다.

균형발전 사업도 지난 10년 동안 투자

를 했고 전체 사업이 1조가 넘었죠.

그러니까 한 자치단체별로 거의 1000억 정도 10년 동안 투자를 했고 앞으로 또 그렇게 2단계 사업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하고도 사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단체들은 예전에 신활력 사업도 했었고요, 또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2~3년 전부터 하고 그다음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 사업처럼 농산어촌 개발 사업도 하고 이게 다시 또 농촌 협약 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사업비가 막대하거든요.

이 사업들도 이 자치단체들이 거의 다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늘지 않죠.

그리고 다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게 됩니다.

아마 10년 동안 수백억 정도 받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저는 충남도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보고 과연 저는 이런 사업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맞는가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거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기초적인 사회서비스를 받아 가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최소한이라도.

그렇게 목적으로 삼은 게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거든요.

이런 목적과 맞지 않는 관광 사업이라든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만들면 어떻게 그 지역의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가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20년 동안 인건비를 얼마 받을 수 있을 건가 이렇게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사업들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금 면 소재지가 있고 리(里)들이 산재해 있는데 면 소재지조차도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에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적어도 면 소재지에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이런 정책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가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리브투게더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정책 사업들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도 그런 정책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도지사 김태흠** 저는 전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거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효과가 있는 사업들이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열거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소멸기금을 쓸 수 있는 목에는 들어가서 아마 넣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효과는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옳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2006년도, '07년도에 충남 정무부지사를 할 당시에 이완구 지사하고 이런 부분을 논의하면서 그 당시에 도 서북부권과 서남부권의 불균형이 와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그때 도입했거든요.

도입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 부분을

유지하고 보완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내용 면에서는 이 부분도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사업에 쓰는지 그것도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보니까 충남 보령에서 대천해수욕장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매각이 쉽게 안 되니까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린 부분의 이자로 쓰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이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이거는 용도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도는 뭐 하고 있냐, 도의원님들은 이걸 못 보냐 이런 농담도 한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 도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소멸기금은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인데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김명숙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명숙 의원** 저는 충청남도가 정책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잘해야 이 사업이 그나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저도 오랫동안 관심이 있어서 다음에 함께 또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태흠** 예.

○ **김명숙 의원**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마을발전소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내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대폭 세입이 늘어나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답게 이런 정책 사업들, 특징 있는 사업들을 시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 **도지사 김태흠**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높게 산정된 것은 아마 이익이 많이 난

다고 그래서 그랬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던 모양인데 이 부분은 타 시도 부분들을 봐서, 우리 슬로건이 ‘힘쎈 충남’인데 타 지역보다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필요한 게요, 제가 지역자원세를 인상시키는 법안도 내고 하면서 국회의원 시절에 몇 가지 그래도 결과적으로 잘한 것이 있다, 자랑할 만한 것 중의 하나인데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 외에 우리한테 떨어지는 부분이 30%인가 25%인가 떨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으로 가고 아마 그럴 텐데요, 이 부분은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써야 된다, 인프라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은 줄이고 도에서 좀 더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충남도의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하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명숙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왜목마을 해수욕장과 독립운동가이며 계몽소설 '상록수'와 독립 시 '그날이 오면' 문학 작가인 심훈 선생의 얼이 숨 쉬고 있는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힘센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이 다섯 가지 도정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충남의 강통 전세 사기에 대한 예방과 둘째로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하여 김태흠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지사님께서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나 이 자리를 빌려 두 사안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현 상황을 진단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충남의 전세가율, 강통 전세 사기 관련입니다.

주거는 가족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기능과 휴식을 통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감당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집값 상승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을 일평생의 꿈으로 갖거나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 문제는 이미 오

랜 기간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많은 국민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매매가격이 굉장히 높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임대를 선택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에 따라 주택매매가격도, 전세 가격도 모두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매매가격과 전세 가격 간의 차이가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전세가율, 즉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간의 차이가 작아지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일명 '강통 전세'입니다.

본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최근 1년 기준 충남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의 경우 79.7%,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81.5%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최근 1년 기준 충남 15개 시군의 주택 유형별 전세가율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80%가 넘는 지역으로 서산·천안·아산·논산이 있었고, 보령과 당진의 경우 약 79%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90%가 넘는 지역이 천안·서산이었고, 80% 이상에는 보령, 그리고 부여가 79.6%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제공 기관 및 시점별 수치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충남 전체와 도내 일부 지자체의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가율이 80%가 넘었을 경우 깡통 전세의 위험 신호로 삼는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충남의 많은 지역이 위험 지역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깡통 전세 사기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하고 충남을 포함한 지방의 보증 사고 현황으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충남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사고 건수와 금액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1월에 비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라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개소 이후 4개월간 피해 접수 총 2549건 중 연령 정보가 확인된 1203건을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 237건 20%, 30대 626건 52%, 40대 205건 17%, 50대 72건 6%, 60대 45건 4%, 70대 이상 18건 1% 등으로 2030세대가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30세대에게는 이 전셋값이 전 재산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금액으로 사실상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충남에서도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으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

는 식의 사후 대처보단 적극적인 예방이 요구되어집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한 법령이 국회에서 한참을 계류하다가 지난달 25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명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처럼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실상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되어 지자체는 중앙 정부 중심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협력하여 전세가율이 높은 시군 또는 일부 단지에 대해 특별히 관리·감독하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 올바른 거래 방법에 대한 교육 마련, 전세사기 의심 매물 신고 시스템 구축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선제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부동산 경·공매 대응 방법, 전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안내, 부동산 불법 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 신설,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맞춤형 주거 정책 안내 및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임차권 등기 및 대항력 우선 변제권 상담 등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상황과 여건이 달라 방법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충남으로 가져오고 적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깡통 전세 사기 의심 거래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2030세대들뿐만 아니라 충남 도민 누

구나 안심하고 주택을 매매하고 임대할 수 있는 충남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충남의 경우 충남 평균 또는 일부 시군이 깡통 전세 위험 수준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깡통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 충남은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관련입니다.

지사님께서 신년사 때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어 나가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건넌다는 의미의 뜻을 가진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도정 활동 중 막다른 길이 있더라도 해결책을 만들어 극복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겠으나 단어 뜻 그대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든다는 계획과 다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길이 되어 주는 도로, 항만, 철도는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원으로 사회간접자본(SOC)에 속합니다.

즉 사회간접자본은 일상생활이나 생산 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각종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충남 서부·남부권의 경우 유독 접근성이 열악한 상황이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도 관계자들의 다양한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하셨기에 서해 지역 산업·관광 활성화나 서남부 철도 교통망 업그레이드 그리고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 등과 같은 사업에 많은 힘을 쏟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잘 추진만 된다면 충남에 큰 활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불균형, 교통체증 등과 같은 여타 문제들까지 해결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편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 추진 계획과 과정을 보다 더 촘촘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되 단 하루라도 신속하게 추진 및 완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먼 훗날의 혜택들을 앞당겨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의 추진 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해대교는 서울·수도권과 충남을 잇는 유일한 고속도로 교량으로 충남 뿐만 아니라 전북·전남 등 서해안을 오가는 교통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심각한 구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강풍이나 낙뢰 등 자연재해나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을 전면 통제할 경우 대체할 길이 없어 제2서해대교 건설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2서해대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기대를 모았으나 지사님의 지방선거 공약에 포함된 이후 제2서해대교 사업이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구간 중 일부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제2서해대교 해저터널 사업이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에 포함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축소되었다” 또는 “고속도로 건설에 속하게 되어 제2서해대교만 추진하는 것보다 사업 추진도 늦춰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무료인 보령 해저터널과 같이 전액 국비 지원을 기대했지만, 민자 건설로 인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도 관계자는 민간 고속도로로 추진하게 될 경우 행정 절차 간소화로 비교적 건설 추진이 빠르고 통행료는 재정 사업으로 건설한 일반 고속도로의 1.1배를 넘을 수 없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국가 재정 사업과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제2서해대교 건설에 더 유리한 선택지라고 판단했을 것이 도의 입장으로 이해했습니다.

민간 자본이 투입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는 높이고 통행료도 부가세 정도만 포함된 단 1.1배 정도라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도가 추구하는 공익과 민간 기업이 추구하는 사익 간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지 또는 통행료 1.1배를 맞추기 위해서 별도의 재정 확보는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인지, 향후 민간 기업과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것인지 등 기대감에서 비롯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 또는 방안이 있어야 도가 도민들과 약속한 대로 저렴한 통행료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사업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사업이나 하루라도 앞당겨서 도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길 바라는 마음이고 지사님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속한 추진 요구, 비싼 통행료 등 고속도로와 관련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향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현재 진행 상황과 함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남 내 전세 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는 서울이나 인천의 빌라왕 같은 대규모의 조직적인 전세 사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우리 도를 통해 접수된 전세 사기의 피해 건수는 총 14건으로 계약기간 종료 이후 보증금의 미반환, 압류로 인한 경·공매 등 주택 가격의 하락,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고 전세 사기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LH와 협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대상 홍보 활동과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피해 사례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서해대교가 당진-광명 고속도로에 포함되면서 중요성이 축소되고 늦춰질 염려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서해대교가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에 포함되면 오히려 빠르게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서해대교 건설은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경제성을 보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또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던 차에 제2서해대교가 포함된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가 제안돼서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적격성 조사 진행은 재정으로 할 때의 예타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볼 때, 지금은 여러 가지 부처의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 민자 사업 같은 경우는 절차 간소화로 속도감 있게 추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적격성 조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비싼 통행료를 우려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대교 하나 가지고 통행료를 더 많이 물고 안 물고 하지를 앓고

구간별로 통행료가 결정되는 거고 또 일반 고속도로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1.1배가 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과거에는 통행료가 좀 비싸고 또 민자가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MRG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MRG는 경영 악화 시에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런 제도들도 없어졌고, 그래서 별도 재정 지원 같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충남도에서는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격성 조사라든가 제3자 공고라든가 실시 협약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진행될 때 이런 과정 속에서 면밀히 챙기고 또 우려하는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철수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지사님을 상대로 지방 외교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세수 부족에 대한 우리 도의 대처 방안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리 도의 대처 방안,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날로 심해지는 경제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우리 충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영향으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수출은 끝 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하였고, 무역수지 적자는 15개월째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겪어 보지 못한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총남이라고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동력이자 우리 지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총남 수출 상황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1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은 125조 원으로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총남이, 그런 우리 총남의 수출액이 작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 큰 폭으로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4월 수출액은 57억 8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나 급감하면서 두 자릿수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총남 수출의 주력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IT 제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표시되는 신냉전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치와 외교라는 외부적인 변수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총남의 수출 효자 품목은 단연코 반도체

체입니다.

수출 1위 품목이고 전체 수출 비중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2020년 10월 이후 20개월 연속 증가하였다가 지난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4.6%나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전산 기록 매체는 78.1%나 추락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 23%, 베트남 21.2%, 그리고 미국 12% 순으로 총남 지역 수출의 대부분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출 대상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우리 수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대중 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총남은 가까운 지리적 위치 등 여러 가지 요인과 우리 충청남도 지방정부의 다양한 외교적 노력으로 문화, 체육, 행정, 경제 등 다방면에서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국외 지방정부 28개 단체 중 중국이 13개 단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러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지방 정부의 다양한 외교적 노력으로 많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대에 지방 정부 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총남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끄럽지 못한 한중 관계 속에서도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전략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충청남도는 향후 대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수출 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1분기 국가 세수가 전년보다 덜 걷히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3조 9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세수 결손이 연말까지 변동이 없을 경우 지방교부세가 약 6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충남의 경우 약 862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 정부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올해 4월 말 기준 충청남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739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1억 7600만 원, 약 2.2%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등 의존 재원과 자주 재원의 감소라는 상황에 직면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달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서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로 힘들어하고 있는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하루하루 생존의 길목에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의 손실과 매출 감소 속에서 먹고살기 위해 대출을 감당해야 했지만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큰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금리는 인상되고 있고 이자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빚을 갚기가 어려워 대출 연체가 지속되고 있고, 연체율은 '22년 말부터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직접 대출 받은 소상공인들의 장기 연체율은 7.9%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기업 대출 연체율의 3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충남의 어음부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충남도가 제출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소상공인 순사고율은 4.43%로 지난해 12월 1.96%와 비교해 넉 달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기업 대출 잔액은 2022년 11월 말 기준 27조 33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상승하였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충남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 지원해 온 4대 보험료 지원을 축소하였습니다.

당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20%와 건강보험, 산재보험 100% 도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100%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또한 일몰 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막막한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견뎌온 소상공인들은 코로나의 터널 끝에 서 있는 지금도 여전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총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일괄 질문을 마치고 지사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추가는 보충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님이 중국 수출 감소에 대한 총남도의 역할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총남도지사로서 저도 중국 수출 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 수출 현황은 2023년 4월 기준 수출액이 57억 8000만 불, 전년 동월 대비 39%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또 전산 기록 매체 등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국가별로는 김선태 의원님 지적대로 중국과 베트남이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작년 4월 8억 300만 불 대비 올해 4월은 5억 2400만 불로 34.8%가 감소

됐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중국의 봉쇄 전략 유지, 미중 갈등, 스마트폰 소비 감소 및 중국 자체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등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수출 감소 타개 방안에 대해서는 수출은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삼성 등 글로벌 대기업 수출에 좌우되기 때문에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아쉽지만 그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6월 말에 중국 4개 지역을 방문해서 수출 확대, 관광 진흥, 미래산업 협력 방안 논의 및 중국 서부 국제 박람회 참여 또 2024년 중국 상하이에 총청남도 해외사무소를 개설하고 총청남도 수출 기업의 거점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등 재원 감소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수 현황은 올해 4월 기준 지방세 누계 수입은 93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세수 감소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감소 요인을 이미 반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액 대비 정상 징수 중인 상황으로 크게 우려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또한 올해 보통교부세는 이미 확정되었고 국가에서 추경으로 감액되지 않는 이상 보통교부세의 감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올해분 정산 과정에서 내년도 감

액은 가능한 상황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의 주시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대책은, 정부는 올해 경기를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는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 도 세수 상황 역시 하반기 경기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장기 미반납·미정산 보조 사업 반환금에 대한 강도 높은 정산 등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물으셨는데, 충남 어음부도율이 전국 1위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기준은 1.04%로 가장 높았으나 올해 4월 기준은 0.24%로 전국 9위 수준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한 도의 지원 축소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을 종료한 것으로 축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 도는 올해 3월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818억 원을 투입,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책 내용 중에서 기존 사업 중에서 9개 사업은 더 확대하였고 신규 사업 8개 사업은 추가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상공인 이자 3.3%를 지원하는 특례 보증 자금을 작년 2700억 원 대비 약 4배 이상 증액한 50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보증 잔액 1조 3000억 중 5월 말 기준 3만 3015건, 7302억 원을 만기 연장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김선태 의원**(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선태 의원**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잠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지방 외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한정돼 있구나’, ‘너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교와 통상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중양 정부와 다르게 정말 진영과 체계를 뛰어넘어서 일본, 중국 다방면에 방문도 하셨고 앞으로 하실 계획이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베이벨리 메가시티 공약 같은 걸 보더라도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여러 가지 충남의 미래 비전에 있어서 중국은 중요한 상대방 국가가 되는 게 맞지요, 지사님?

○ **도지사 김태흠** 예.

○ **김선태 의원** 지사님의 여러 가지 광폭 행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서 다소 아쉽고 걱정되는 부분도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라는 자리는 정치인인 동시에

행정가 등 중복되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사실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인 언사, 발언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었나 하면 신문 보도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셔틀외교를 지지하고 한국의 일부 세력들이 친일과 매국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런 약간 민감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발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요즘 여러 가지 중국의 대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를 분명히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약간 옥에 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외 통상 정책을 하시면서 조금은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홍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가 한일 정상 셔틀외교를 정상화시켰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 매국노다 아니면 친일파다 해서 비판을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을 비판하기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더 적극적인 화답을 해 주고 적극적으로 뭔가 정상화를 계속 지속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일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저의 화법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본에 프로모션하고 그러는 데도 일본의 언론인들이 많이 왔는데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감동을 받은 스피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요?

○김선태 의원 그 뒷말을 또 봤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

을 해 주셨고…….

○도지사 김태홍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 좀 더 적극적이고 뭔가 긍정적이고 또 대한민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자세 변화를 요구하는 발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하여튼 정치인한테는 늘 어떤 입장 표명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명 스탠스라고 하지요.

당신의 입장이 뭐냐, 어느 순간에 입장을 말하게 되면 피아가 딱 생깁니다.

그 말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 또 그 말을 듣고 어떻게든지 정말 불쾌한 사람 여러 이런 게 있어서 행정가로서의 지사님 역할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충남에 대한 투자라든가 충남에 대한 관광객들의 유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만약에 중앙정부가 일이라도…… 뭔가 좀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득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말씀을 저는 전해드린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수 부족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얼마나 부족할지, 부족하면 어떤 거부터 줄일지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상황 파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매년 재정소요 점검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아시겠지만요.

국회 통과 법률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재정이 국가나 지자체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그렇다고 그러면 최근에

나온 것은 2027년까지 약 80조 정도 넘게 재정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세출 증가는 뺀 수치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부과되는 19점 몇 프로의 교부세가 또 따라오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받았던 답변은 그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걸 예단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사님께서 더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 입장에서는 많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 또 앞으로 시행될 것들, 우리가 얼마나 재정이 필요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지금은 많이 분석을 하고 또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중앙의 변화 이런 것들도 충분히 탄력적으로 반응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홍** 예, 좋은 문제 제기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향후 자원 감소라든가 재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면서 예산편성도 하고 대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선태 의원** 재정의 역할이라는 것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충남의 기초단체 중에 하나가 흑자를 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우리가 흑자를 내서 정말 잘했습니다라고 홍보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2013년도 이후 10년 만에 감 추경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대구 시도 감액 추경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도는 혹시 그런 입장이 있

으신가요, 지사님?

○**도지사 김태홍**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2023년 본예산 편성 시에 감소 요인을 어느 정도 저희가 이미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까지 보면서 재원 감소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 예산을 정부가 편성하는 추이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아무래도 감액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도의회에서도 올해 본예산에 대한 주요 특징과 분석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행하거든요.

보고서를 보면 올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해서 작년보다도 예산 규모가, 재정 규모가 굉장히 더 커졌어요.

이런 상황, 규모는 커졌는데 또 감액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신다니 약간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시기 조정이 필요하거나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 또 불요불급한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각 사업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플랜 A, B 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것부터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검토·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어느 순간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줄이기 쉬운 것부터 빨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부터 줄여야 될지 고민을 먼저하고 대비를 하는 게 맞는 거 같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홍** 예, 지방세의 재원 감소 요인을 이미 본예산 때 편성을 한 부분과 재원이 커진 부분을 똑같이 비례해

서 볼 문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국가 전체적인 틀 속에서도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적인 정책들을 도입하면서, 일단 재원이 늘어나면서 또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부채는 1조 정도지만 그런…… 한 5000억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투자 개념의 부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조 정도면 저는 양호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난 민선 7기 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저는 1조 정도면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빛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빛의 내용이 중요하고 또 빛을 진 이유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모성이나 아니면 소비성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많아지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지만 투자형의 개념적인 부채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겠습니다.

○ **김선태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채가 정말 필요했던 건지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보니까 도의 통합재정수지가 '19년도에는 342억 정도의 적자에서 '23년도 올해 본예산에 2186억 정도 적자로 해서 한 6.4배 정도가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방 채무도 '19년도에서 '23년도까지 연평균 한 21% 정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그때 코로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요.

그다음 예산안 대비 지방 채무 비율도 '19년에 한 7.7%였었는데 '23년도 올해 예산 봤을 때는 13.4%로 한 5.7% 정도가 더 악화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19년도까지는 외부 차입금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20년도 이후로 외부 차입금이 늘어났고 '23년도 올해에는 외부 차입금이 4918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을 수반하는 부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 **도지사 김태흠** 약 1년 동안 외부 차입은 아직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외부 차입이 민선 7기 때 한 5000억 가까이 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가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지 부분이나 아니면 현금성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확정을 하면 그거에 지방정부에서도 맞춰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함께 이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큰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우려스러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김선태 의원** 예, 하여튼 도의회에서 발간한 예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차입금이 2020년도에 처음 발생하기 시작해서 1771억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4918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지방 채무가 올해 1조 3253억 정

도가 예산이 되는데 '27년도에는 더 증가해서 1조 5578억 정도로 예산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런 지방 채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

○ **도지사 김태홍**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신규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많이 댔고 그다음에 국가 예산이 9조 원 시대가 됐고 내년에 10조 원 시대가 되는 상황이라면 일단 케파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예산하고 지방정부 예산을 매칭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규모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게 소모성이 아니고 투자 개념이고 그다음에 경제나 아니면 삶의 ... (창취불능)... 앞으로의 발전 동력을 삼을 수 있는 요소라면 좀 빚을 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김선태 의원** 꼭 필요한 사업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런데 어차피 세수가 조금 더 위축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지사님?

그런 면에서도 알뜰하게 써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e-호조에서 자료를 잠깐 봤는데 보통 우리가 '행사성 예산'이라고 아예 대 놓고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1회 추경 때 한 17억 4300만 원 정도를 '우리 행사성 합니다'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다 보니 무슨 단체에서 어디 선진지 견학 가시는 이런 신규 예산들이 1억 원 이상씩 몇 개 단체가 올라오고, 이런 예산들부터 먼저 우리가 잘 관리해서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사

님?

어떤 것부터 줄일 것이냐에 대한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이것이 행사성 예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만 해도 17억이 넘어요, 1회 추경 때 신규로.

○ **도지사 김태홍**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제가 일부에서 아쉽다고 비판도 받고 하면서 절약한 여성농업인들 바우처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전환된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새로 생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 **김선태 의원** 견학 가는 비용을 1회 추경 때 신규로 올린다는 것은.....

○ **도지사 김태홍** 같이 맞물려 있을 거예요.

○ **김선태 의원** 그건 조금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지사님?

○ **도지사 김태홍** 예.

○ **김선태 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타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비자발적으로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 5년간 코로나 팬데믹 자영업자 수가 한 18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소득은 매년 더 감소하고 있고요, 우리 충남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모두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고,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민선 7기에서 여러 가지 시행했던 사업들 중 나름대로 많은 호응이 좋았던 사업이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 현금성 복지 예산을 줄이겠다라는 취지로 그걸

다 없애신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지사님?

○ **도지사 김태홍** 예, 왜냐하면 4대 보험 같은 경우 비상시국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4대 보험은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코로나가 종식이 됐으면 줄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데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고기를 잡는 법과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부분과 밥을 먹여주는 것과 이런 부분들은 다르다는 시각 속에서 보지 전체적인 지원 케파는 더 늘었어요.

○ **김선태 의원** 이 사업을 일몰하고 또 여타 다른 사업들을 더 늘렸다는 취지로 아까 답변 주셨지요?

○ **도지사 김태홍** 예.

○ **김선태 의원** 본 의원은 아무래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대체가 아니라 더 증가를 해야 되지 않나가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 **도지사 김태홍** 예, 그렇지요.

○ **김선태 의원** 그런데 문제는 작년 하반기 일몰된 시점이 훨씬 더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 당시가.

자영업 대출자들, 저소득층 연체율을 보면 작년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그 이후 3분기에 연체율이 0.7%에서 4분기에는 1.2%로 0.5%가 더 높아졌고요,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4분기에 1.3%, 그 이후 3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게 작년 일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고소득자, 자영업자 연체율도 0.7%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대출 증가 폭도 저소득층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2019년 4분기에 70조 8000억 원에서 작년 4분기에 119조 9000억 원으로 69.4%나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연체율이나 대출 규모가 굉장히 더 불어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더 증가된 시점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그때가 더 지원이 필요했던 시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그리고 “현금성 복지를 줄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층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던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 그런 사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정은…….

○ **도지사 김태홍** 잠깐만요, 지금 3분기·4분기 말씀하시는데, 제가 7월 1일에 취임을 했거든요.

그러면 3분기 시작할 때 취임을 했어요.

취임하고 난 다음에 연말까지가 3분기·4분기인데 3분기·4분기는 제가 안 잘랐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작년 예산은 그 전에 이미 모든 부분의 예산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 **김선태 의원** 맞습니다, 지사님.

○ **도지사 김태홍**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

○ **김선태 의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예산 부족으로 끊긴 게 작년 11

월·12월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고용 보험, 건강·산재보험 100% 지원 이 사업도 작년 9월부터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몰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일부러 끊은 것은 아니시지만 그게 일몰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 도는 그냥 방치한 거지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정은 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은 거기에서 의사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진단과 빠른 처방이 중요합니다.

암 환자한테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암 환자한테 맞는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현금성 복지는 운동이나 약으로 듣지 않는 질병들을 우리가 어떤 주사제로 딱 처방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현금성이니까 안 된 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주사를 놓는 심정으로 꼭 필요한 건 해야 된다.

○**도지사 김태홍** 현금성 중에서 농어민 수당 같은 경우도 저는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보완을 해서 좀 더 이 부분을 개선시켰거든요.

그런데 어느 특정 하나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실은 이 현금성도 도입되면, 돈 주면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한테 재정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재원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대로 대응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100%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고민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현금성 측면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저는 참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다 세원이고 재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고 표를 얻어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현금성- 주던 것을 폐지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또 저한테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 속에서, 그러니까 민선 7기까지 오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부분들은 가지만 우리가 개선해서 재원도 아끼고 다른 부분으로 써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하고, 또 하나 일부에서는 저보고 “민선 7기에서 하던 사업들 계속 유지하고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재원이 계속 많이 늘어나면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걸 -계속을- 계속한다면 제가 하고 싶은 일, 소신 그다음에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대로 유지한다면.

일부는 수정하고 보완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이해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김선태 의원** 예, 지사님의 그 고민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하고요, 그런데 현금성 복지 예산이라는 것들이 아주 엄청나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민들한테 돈을 준다는 생각보다는 세금 내신 거를 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혜적으로도 누구한테 돈을 적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0년도 인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418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1201억 정도의 효과가 있었고 소비가 2조 원 정도, 골목상권의 추가 유입액이 240억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도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으신가요, 지사님?

○ **도지사 김태흠** 지금 말씀하신 수치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다, 그리고 또 수치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국민 세금이, 재정이 투입된 부분들 같은 경우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난 모르겠고요, 다만 이 부분은 다른 데처럼 ‘지역화폐 이 부분을 나는 없애겠다, 백지화하겠다’ 그런 생각은 않고 각 시군에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정하고 또 국가에서 정하고, 이 상황 속에서 저의 스탠스는 그거에 같이 함께 가지 ‘이걸 더 확대를 시키겠다, 이걸 확 축소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김선태 의원** 그런데 하여튼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것들이 발표되고 있고 우리 도도 2022년도 3월 달에 충남연구원에서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민 4명 중의 1명이 사용하고 있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한 3.5조 원에 이른다 할 정도로 우리 도에서 홍보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국가에서는 이번에도 지역화폐에 관련된 것은 1원도 책정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활발하게 지금 쓰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군에서 얼마큼 이것들이 활용되고 있고 어떻게 잘 선순환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이 작년에 했던 연구가 있으니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많이 도움이…….

○ **도지사 김태흠** 지금 재정 걱정하셨던 그걸 더 확대를 하라 그러면 좀 그런 것 같고요…….

○ **김선태 의원** 그러니까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순위를 1, 2, 3, 4 정해서 써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 **도지사 김태흠** 그래서 시군에서 요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함께 하고 그러는데 이걸 제가 주도적으로 그다음에 또 도에서 이걸 확대시키는 부분들은 저는 하지 않겠지만 시군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김선태 의원** 같이 연구를 해 보고요, 청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니까 -아마 하나로마트 같아요-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걸 못 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을 위해서 30억 초과되는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고, 여러 가지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 되는 거를 찾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거에 한번 적극적으로 해야…….

○ **도지사 김태흠** 제가 볼 때 그런 방향

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 **김선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도지사 김태흠** 예.

○ **김선태 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김선태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2일 동안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신 제안과 시정 요구 사항을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14분)

○ **의장직무대리 홍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45회 정례회를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명숙	김민수	김복만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종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용국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조철기 의원 찬성 의사 표시, 실제 찬성 의원 31인)

○ **출석의원(44인)**

김복만	홍성현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명숙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현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병인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최창용	편삼범

○ **출장의원(1인)**

조길연

○ **청가의원(1인)**

신영호

○ 의회사무처

처장 이정구
의사담당관 정제석

○ 출석공무원

<충청남도>

도지사	김태흠
행정부지사	김기영
정무부지사	전형식
기획조정실장	박정주
자치안전실장	정한울
소방본부장	김연상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
농림축산국장	오진기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해양수산국장	노태현
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정책기획관	김영관
감사위원장	배병철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보건환경연구원장	김 옥
공보관	장진원
대변인	주 향
청년정책관	조원태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김지철
부교육감	김일수
기획국장	김현기
교육국장	이병도
행정국장	황인명
감사관	최병금

연구정보원장	김영숙
교육연수원장	김준태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
평생교육원장	이영진
소통담당관	남도현

○ 속기공무원

강미선	류장열	문지원	장유나
신소라	문별아	전지혜	이순필
박향숙	이수월		